

개발사업때 야생동물 살 곳 따로 조성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번식지·먹이자원까지 고려

지자체·사업자 “예산 등 현실상 어렵다” 진통 예상

앞으로는 개발사업으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경우 개발 사업자가 따로 동물이 살 곳을 만들어 줄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나 사업자 등은 도심권 안에 대체서식지를 따로 조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은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해 대체서식지의 조성·관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마련·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체서식지’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동·식물의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해 대체서식지의 조성·관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마련·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원하는 지역을 말한다.

새롭게 마련된 지침에는 개발사업 예정지에 멸종위기종 등 야생동물이 서식할 경우 개발 사업자가 야생동물을 위한 대체서식지를 별도로 만들도록 하고 있다.

대체서식지는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조성·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서식지 조성 및 관리 비용은 개발 사업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또 서식지 조성 후 향후 3년간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포유류는 동면지, 보금자리, 먹이자원, 활동권 ▲조류는 번식지, 채식지, 월동지, 휴식처, 잠자리 ▲양서·파충류는 집단산란지, 월동지, 동면지, 이동경로 ▲어류는 번식장소, 먹이자원, 홍수성 이동경로 등의 구성요소를 핵심적으로 갖

춰야 한다.

환경부는 대체서식지의 조성과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앞으로 전국 대체서식지를 통합 전산화해 관리하고 전문가,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해 평가하는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실제 미국, 유럽, 호주 등의 선진국은 30여년 전부터 대체서식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국제협약인 생물다양성 협약도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생물다양성 감소를 상쇄하는 방안으로 권고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때 멸종위기종 등 주요 생물종의 서식지를 원형 그대로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훼손될 경우에는 생물종이나 사업유형에 따라 대체서식지를 조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체서식지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에 많은 의문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자체들은 이번 환경부의 지침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심 안에 따로 대체서식지를 조성하는 것이 현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조성하는 것이 현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골프장 등을 조성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원형보존 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심 안에 대체서식지를 조성하게 되면 부지확보, 서식지 조성 등으로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게 돼 이를 감당할 만한 개발 사업자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향후 환경부의 지침을 받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지만 도심 안에서 시행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박미경 사무처장은 “가장 핵심은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것이다. 종합적인 실태 조사를 거쳐 ‘절대 보전 구역’을 우선 설정해야 한다”며 “대체서식지를 조성하더라도 서식지 공간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경로, 번식지, 먹이자원 등까지 고려해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어린이용품 과다 유해물질 엄단

환경부, 2011 업무계획 보고… 제조·유통 제한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젖병이나 블이용 고무공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제조와 유통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만 곳이 넘는 보육원이나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간 전체가 2016년까지 바닥재·벽지 등에 유해물질이 들어있는지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유영수 환경부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위해성이 판명된 프레이트와 주석화합물류 등 5개 물질을 어린이용품에 알마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관리 적용대상을 현재 6585곳에서 2016년까지 11만975곳 전체로 확대하고 시설 내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하면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을 두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60만장 가량 사용 중인 그린카드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150만장 이상 보급하고, 렌터카와 ‘카셰어링(car sharing)’ 제도를 활용해 전기자동차를 2500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자동차 구매문화를 친환경적으로 바꾸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에 보조금을 주고, 많으면 부과금을 매겨 가격을 차등화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지구온난화 추세와 4대강 사업 이후 달라진 여건에 맞춰 수질관리 방침도 손질한다.

4대강 지역의 경우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자연적으로 차단하는 ‘수변생태벨트’를 만들 계획이다.

총인(T-P)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등 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4대강 중점권역 34곳의 하수도 시설에 2조8천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던 하수도 정비계획을 각 유역별로 세우도록 해 시·군간 중복 투자를 방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4대강 사업 영산강 공사 피해 확산

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선정

광주·전남권 환경운동연합은 27일 광주·전남 지역의 주요 환경현안 가운데 ‘4대강 사업 영산강 공사로 인한 피해 확산’ 등 ‘2011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로 선정·발표했다.

올해는 ▲4대강 사업 영산강 공사로 인한 피해 확산 ▲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 갈등 ▲후쿠시마 핵사고로 방사능 공포 확산 ▲고흥, 해남군 핵발전소 후보지 신청포기 ▲이상기후로 인한 농수산물 감소 등 농어민 피해 ▲전남도 내 자리산,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 ▲도시환경정상회의 광주시 개최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청색 청진호 ▲환경시설 부설 및 비리 논란 ▲영산강 하구둑 저층수배제시설 논란 등이 선정됐다.

4대강 사업, 지구온난화로 인

한 동작률 피해,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등의 난개발 문제가 지난해에 이어 선정돼 현 정부 들어 진행되고 있는 토목사업, 핵발전소 확장정책 등으로 인한 갈등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등산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 노력과 세계자연유산 등재 노력,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환경정상회의 개최 등 지역의 자연자원에 대한 가치 부각과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등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편, 광주·전남권 환경운동연합은 매년 말 지속가능한 녹색 광주·전남의 길을 모색하고자 주요 환경현안 10가지를 선정·발표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지수는 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50%)과 배출수준(30%)·기후변화 대응정책(20%)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

로 산출됐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우리나라의 노력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27일 독일의 비영리 민간기후연구소인 ‘지면워치’(German-watch)가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58개국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계량화한 ‘기후변화 대응지수’를 보면 한국은 51.3점을 얻어 41위를 기록했다.

이 단체가 지난해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 34위였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OECD 30개 나라 중에서는 21위였다.

양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은 각각 57위, 52위를 기록해 최하위권으로 처졌다.

/연합뉴스

한국, 온실가스 감축노력 많이 부족

58개국 중 41위… 기후변화 대응지수 7계단 하락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우리나라의 노력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27일 독일의 비영리 민간기후연구소인 ‘지면워치’(German-watch)가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58개국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계량화한 ‘기후변화 대응지수’를 보면 한국은 51.3점을 얻어 41위를 기록했다.

이 단체가 지난해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 34위였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OECD 30개 나라 중에서는 21위였다.

양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은 각각 57위, 52위를 기록해 최하위권으로 처졌다.

/연합뉴스

보성 득량만·여자만 해양쓰레기로 몸살

부유물·폐어구 등 700t… 郡, 내년 9억 투입 정화활동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수협과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해 수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성군은 내년에도 9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득량만과 여자만 등지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황금어장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 = 선상근기자 sun@

농성동 리더스하이 주택전시관

매매

문의처 : 010-3625-6984



사업명 (주)혜주주택전시관 및 사옥신축공사

사업장 광주광역시 서구 능성동 645-1번지

대지면적 2,411.20㎡(729.39평)

용도지역 일반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준주거지역

건폐율	59.53%(법정 : 60%)	용적률	478.73%(법정 : 480%)
규모	지하 0층 지상 9층	최고 높이	55.50m
건축면적	1,435.47㎡(434.23평)	건축연면적	11,543.18㎡(3,491.81평)
주차대수	80대(법정 72대) : 본관 24대, 부설주차장 56대	주차면적	201.3평, 연면적 1,233.4평, 지상3층 철골조
승용승강기	17인승(4대), 15인승(1대) 총 5대	승용승강기	41.33㎡(13평)
에스컬레이터	상, 하 전용왕복 에스컬레이터 시공 : 1층~7층까지 설치	에스컬레이터	41.33㎡(13평)
용도	근린생활시설(금융, 소賣점, 일반음식점), 문화집회시설 및 업무시설	용도	근린생활시설(금융, 소賣점, 일반음식점), 문화집회시설 및 업무시설

특별 면적 개요

층별	면적	평	층고	용도
1층	1,374.92	415.91	4.8m	근생, 업무시설, 기계실
2층	1,346.28	407.25	7.5m	문화 및 접회시설(전시장)
3층	1,355.08	409.91	7.5m	문화 및 접회시설(전시장)
4층	1,359.78	411.33	7.5m	문화 및 접회시설(전시장)
5층	1,360.28	411.48	3.75m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6층	665.60	198.32	3.75m	업무시설(사무소)
7층	1,375.18	415.99	4.8m	업무시설(사무소)
8층	1,385.18	419.02	4.8m	업무시설(사무소)
9층	1,330.88	402.59	4.5m	업무시설(사무소)
소계	11,543.18	3,491.81		

정부기획(김정기) 14,000,000,000원

매매 예정 가격 12,000,000,000원

현 공정율 약 85% 진행

적용 가능 용도 예식장, 주택전시관, 업무시설, 컨벤션센터, 일반전시관, 교육장, 학원시설 및 실내 휴트니센터, 워터파크, 영화관, 극장, 종교집회시설 병원등 최대승고가 7.5m 이므로 다양한 건축물의 시설군, 용도군 도입가능 함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매매

▶ 자연녹지(물류창고, 공장적합)

광산구 비바이동, 비아 IC에서 5분거리, 11.463㎡(3,468평) 3.3m²당 70만원

▶ 계획관리지역(물류창고, 공장 기타용도기능)

광산구 송학동, 니주 IC에서 3분거리, 21.914㎡(6,630평) 매매가 22억

▶ 계획관리지역(전원주택, 연수원 공장, 창고, 투자, 기타)

광산구 양동, 용성지동차 학원인근, 28,845㎡(8,726평) 대지 4,480평, 건축물을 있음, 매매가 13억원

▶ 준주거지역(병원, 시옥, 임대용상가건물신축부지적합)

화정동, 광교간도로변, 지하철역부근 대지 1,520㎡(460평) 3.3m²당 300만원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 풍암동, 지상6층건물, 보증금1억2천만원 월820만원 매매가 13억

▶ 용봉동 지상4층 보증금2억2천만원 월810만원 매매가 13억

수익성 좋은 다가구 주택